

6.13 지방선거 신규 당선자 재산등록사항 공개

전북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시·군 의회의원 92명, 평균 재산액 5억4800만원

전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 신규 당선자 92명의 재산등록사항을 지난 28일자 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공개대상자는 6.13 지방선거에서 새롭게 당선되어 재산등록의무가 발생한 전북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시군 의회의원으로, 공개재산은 임기가 시작된 2018년 7월 1일

기준 최초 신고서에 등록된 재산으로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한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은 평균 재산이 5억 4천 8백만 원이었다.

개인별 재산공개 목록은 전북도보 및 전라북도 홈페이지, 도정정보, 도정자료, 전북도보에서 확인 가능하다.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에 대하여 12월까지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한, 재산심사 결과 잘못 신고한 금액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처분을 관할 지방법원에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박해산 도 감사관은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더욱 엄정하게 운영하여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기자

추석맞이 부정축산물 특별단속 25개소 적발

최고기 DNA 불일치 표시기준 위반 등 위반업소 행정처분

전북도는 지난 3일부터 21일까지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추석맞이 부정축산물 위생단속 및 수거 검사에서 25개 업체 28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최고기 DNA 검사 불일치 2건', '차체위생관리기준 미준용 3건', '표시 기준 위반 4건', '건강잔단 미실시 1건', '위생교육 미실시 7건', '시설기준 위반 6건', '위생복장 미흡 및 시설 불결 3건', '도축 검사결정서 미보관 1건', 기타 시정조치 1건 등이다.

도는 위반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시설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진행 중에 있으며,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 보수 위생교육을 수료하도록 행정명령을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는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기자

정부, 내년 2월까지 AI·구제역 특별방역기간 운영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제 방역대책 점검회의 개최

정부는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이 높은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가축질병 예방활동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농식품부, 행안부, 국방부, 환경부, 경찰청, 질병관리본부, 검역본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전국 17개 지자체 부단체장이 참여했다.

정부는 가축질병 예방활동과 유사시 대응체계를 구축해 AI 위험지역 예방조치·구제역 백신접종 강화 및 상황

실 및 특별방역 TF 운영 등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홍 실장은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힘든 싸움을 시작하게 됐다"며 "특별방역기간 중 3km 이내 살처분 원칙, 오리 사육 휴지기 등 가축 사육제한 구체화 및 선제적인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축산시설 점검, 소독, 예방과 같은 기본적인 방역활동을 철저히 수행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AI·구제역 방역 결과 과거에 비해 현저히 나아진 성적표를 받았다. AI의 경우, 지난해 383건에서 지난해 22건으로 줄었고 올해는 3월 17일 이후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

다"며 "선제적 방역조치를 강구해 중앙부처, 관계기관, 지자체까지 긴밀한 협업 체계가 가동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홍 실장은 "이러한 성과는 방역에 자신감을 주기도 했지만 자칫 방역 소홀로 이어질 수 있다. 익숙함이 방심을 낳고 방역 취약점을 만든다"며 "올해는 겨울 철새 번식기에 러시아에서 AI 발생이 예년보다 늘어 국내 유입 가능성에 긴장감을 갖고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 회의에서 정부가 마련한 2018년 특별대책을 공유·점검하고 보완할 사항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만간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한다.

/뉴시스

이 총리 "방명록 왜곡한 가짜뉴스 유포... 호찌민 주석에 대해 쓴 것"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8일 "호찌민 주석의 거소를 방문해서 쓴 방명록을 왜곡한 가짜뉴스가 나온다"며 "아비한 짓을 멈춰달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 "전 다이 광 베트남 국가주석 장례식에 참석했던 9월 28일 조문 직후 고(故) 호찌민 주석의 거소를 방문, 방명록에 쓴 글"이라며 "이것을 왜곡한 가짜뉴스가 나온다"고 적었다.

이어 "아비한 짓을 멈추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이같은 글과 함께 당시 작성한 방명록을 찍어 올렸다.

이 총리는 지난 25~28일 광 주석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베트남을 방문했다. 이 총리는 조문 후 호찌민 주석의 거소를 방문해 '위대했으나 겸손하셨고, 겸손했으나 위대하셨던, 백성을 사랑하셨으며, 백성의 사랑을 받으신 주석님의 삶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부끄러워집니다'라는 방명록을 남겼다.

이 총리는 거소 방문 후 자신의 SNS에 "베트남 국부 고(故) 호찌민 주석 거소 주석공이 불편하다며 식민지 시절 프랑스 전기배공들의 집을 개조해 겸손하게 생활, 소회를 남겼다"는 글을 찍어 올렸다. 방명록을 찍은 사진도 함께 게시됐으며, 이 사진은 언론에 제공돼 보도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총리가 호찌민 주석에 대해 작성한 방명록은 '주석님'이라는 표현을 근거로 '국무총리가 김정연에게 쓴 글'이라는 가짜뉴스로 둔갑했다. 심지어 '공산당 간첩이다', '국무총리가 노골적으로 좌빨임을 선언한다'는 비난글까지 유포됐다. 이같이 왜곡된 주장이 퍼지자 이 총리는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SNS에 글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선서 지난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해양생물 구조대 발대식에서 구조대원들이 선서하고 있다. 해양생물 구조대는 바다에서 구조가 필요한 해양생물을 발견했을 때 신속한 구조 활동을 위해 꾸러졌으며 해경과 롯데월드 아이리움 해양생물 구조요원 등 총 300여명으로 구성됐다.

임실군 "N치즈축제 무료셔틀버스 맘껏 이용하세요"

임실군은 오는 10월 8일부터 9일까지 개최되는 2018 임실N치즈축제장을 찾는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무료셔틀버스를 대폭 확대, 운영한다.

군은 주말부터 시작하는 임실N치즈 축제에 전국적으로 많은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 관광객 편의와 축제장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2개 노선의 무료셔틀버스를 운영한다.

임실노선은 임실군생활체육공원을 출발해 임실군청을 경유하여 임실치즈테마파크를 왕복하는 무료셔틀버스를 20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전주노선은 전주종합경기장에서 출발하여 전주시청과 한옥마을(보원호벨)을 경유하여 축제장을 왕복 운행하는 셔틀버스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40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특히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전주를 연결하는 셔틀버스 운영으로 한옥마을

을 찾는 관광객들이 쉽고 편리하게 임실N치즈축제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실N치즈축제에는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몰리면서 교통문제로 인한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특히 45만여명이 몰린 지난해 축제에는 무료셔틀버스 운영을 확대했음에도 교통체증으로 인한 방문객들의 불편이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올해는 지난 해 방문객들이 겪는 교통문제를 크게 보완하여 셔틀버스 이용자의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특히 전주방에서는 오는 관광객들의 편의도모를 위해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셔틀버스를 수시로 운행하는 등 해소대책을 세웠다.

또한 군청 전직원이 교통요원으로 투입돼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치즈마을

일원, 군청과 임실을 소재지 곳곳에 배치, 원활한 교통순환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심 민 군수는 "해마다 기대 이상의 많은 방문객이 축제장에 오셔서 교통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었는데 올해는 이를 최대한 보완하는 대책을 세웠다"며 "축제장을 찾아주시는 관광객들이 교통문제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셔틀버스 운영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군청 교통행정팀(☎063-640-2573~5) 또는 임실N치즈축제 홈페이지(www.imfestival.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실=진홍영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靑, 유은혜 후보자 청문보고서 국회 재요청... 오늘까지

청와대는 지난 28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다시 채택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으로 지난 27일 무산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어 "오늘 유 의원에 대한 청문보고서 송부 재요청을 한다. 기한은 10월 1일까지"라며 3일 간의 재송부 기한을 정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안을 받은 20일 이내에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 대통령에게 송부해야 한다. 20일이 지나도록 인건이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다시 요청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청문요청서

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20일이 지난 시점인 28일까지 국회가 청문보고서 채택을 해야 했다. 다만 추석 연휴 등으로 시한이 27일로 한 차례 연장된 바 있다.

그러나 27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당의 불참으로 회의는 무산됐다. 앞서 유 후보는 정치자금법 위반, 위장전입, 남편 재산 축소신고 의혹 등에 휩싸인 바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10월 1일까지 재송부 기한을 못 박으며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만일 재요청 기간에도 유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이 직권으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등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장관을 비롯한 그 외 정부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뉴시스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